

2015년 지방직 9급 공채 기출문제

(2015년 6월 27일 시행 · A책형)

행 정 법

해설 최우성 교수

0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②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 ③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 ④ 행정법규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정답 : ④

해설

- ① × :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 : 통고처분의 여부는 재량이다. (대판 2007.5.11. 2006도1993)
- ③ × :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의 고발 조치에 의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된다.
- ④ ○

0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 ② 행정처분에 불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③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① ○ : 부담의 불이행은 해제조건과 달리 철회사유가 된다.
- ② × : 행정처분에 불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아니한다. (대판 2009.6.25. 2006다18174)
- ③ ○
- ④ ○

0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 ④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후에는 갱신전의 범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①

해설

- ① × :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관련 통계자료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나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대판 2004.3.18. 2001두8254)
- ② ○ :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1.6.15. 99두509)
- ③ ○ : 대판 1985.1.22. 84누647
- ④ ○ : 허가갱신은 기존의 허가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갱신전 위법사유는 갱신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0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청에 의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④ 인허가외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정답 : ④

해설

- ① ○
- ② ○ : 대판 2003.2.14. 2001두7015



③ ○

④ × : 인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 2011.1.20. 2010두14954)

05.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 ③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

해설

① ○

② ○

③ × : 표제부에 "행정심판청구서"라 기재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이의신청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④ ○

관련판례 :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구상금]

[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보건의인 甲에게 치료를 받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유족들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甲이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甲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중보건의인 甲에게 치료를 받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유족들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甲이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甲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乙과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乙의 유족들에 대한 패소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乙과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甲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0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②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① ○ :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② ×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7.9.12. 96누14661)

③ ○ : 동법 제29조 제2항

④ ○



**0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 ②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 ④ 적법한 권한 위임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정답 : ④

해설

- ① 무효 : 대판 2001.2.23. 2000다68924
- ② 무효 : 대판 2006.6.30. 2005두14363
- ③ 무효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후행행위도 당연무효가 된다.
- ④ 무효× : 대판 2004.11.26. 2003두2403

0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 ㉡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 ㉢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 ㉣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 ②

해설

- ㉠ 처분성 인정
- ㉡ 처분성 부정 : 사법행위
- ㉢ 처분성 인정
- ㉣ 처분성 부정 :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 ㉤ 처분성 인정 : 대판 2007.10.11. 2007두1316
- ㉥ 처분성 인정 : 대판 2013.1.16. 2010두22856
- ㉦ 처분성 부정 :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09.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②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정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 ④ 시행령 규정의 위헌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②

해설

- ① ○
- ② × :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대판 2002.6.28. 2001두1925)
- ③ ○
- ④ ○

10.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①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② ○ : 동법 제15조



- ③ ×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동법 제12조)
- ④ ○ : 동법 제16조

12.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 ③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④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 :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 ② ○ : 대판 2008.6.12. 2006두16328
- ③ ○
- ④ ○

1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 ④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 ③

해설

- ① ○ :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법령에 딸 당연히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위법은 아니다.(대판 2000.11.28. 99두5443)

- ② ○
- ③ ×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 ④ ○ : 대판 2008.6.12. 2007두1767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의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 ③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대집행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 ①

해설

- ① ○ :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건축도급계약은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 :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철거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③ × : 재량권이 인정된다.
- ④ × : 최초 계고가 처분이다.

15.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 ④

해설

- ① ○ : 법령 그 자체는 처분적 법규를 제외하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
- ③ ○ : 부작위청구소송은 비법정항고소송으로서 판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④ × : 재결의 고유한 위법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계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
 ①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
 ③ ○
 ④ ○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①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서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 :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
 ③ × :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심판위원과 함께 심리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된다.
 ④ × :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8.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서울지방경찰청장
 ③ 종로경찰서
 ④ 종로경찰서장

정답 : ④

해설

이 문제는 권한의 내부위임관계에서 경찰청장 명의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종로경찰서장 명의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종로경찰서장이 된다.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④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청소년보호법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은 법규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②

해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면 이를 시행규칙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고시 등으로 규정하면 그 효력이 무효가 된다.